

‘의대 증원’ 전남대 지역인재 선발 145명 예상

올 지역인재 72.8% 기준 54명 늘듯...조선대 60% 선발 땀 90명선 전북지역 문호 넓어지면 광주·전남 고교생 의대 진학 더 많아질 듯

전남대와 조선대의 의대정원이 크게 늘자 광주·전남 고교 출신 지역 인재 선발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전남대와 조선대에 따르면 정부가 전남 전남대 의대 정원을 현 125명에서 75명 증원한 200명으로 배정했다. 조선대는 현재 의대정원 125명에서 25명 늘려 150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대로 지역으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한 데 따른 결과다.

새 정원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 치를 올리고 고 3년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의대 정원이 확대됨에 따라 광주와 전남·북지역 인재 선발 규모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남대는 올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72.8%로 정해 모두 91명을 선발했다. 전남대는 현재 법적으로

로 정해진 지역인재 선발 비율 40% 보다 크게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산술적으로 단순 계산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54명 늘어난 총 145명을 지역인재로 채우게 될 전망이다. 전남대가 145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한다면 서울대 의대 정원(135명)보다 숫자가 많다.

조선대는 지역인재 선발비율 57.6%에 근거해 올해 정원 125명 가운데 72명을 선발했다. 조선대는 정부의 권장에 따라 지역 인재 선발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선대가 정부의 권고를 수용해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60%대로 끌어올리면 올해보다 18명 늘어난 90명으로 증원된다.

전남대 관계자는 "전남대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으나 정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

라 현재의 선발 비율을 유지할지, 조정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대 의대로 142명에서 200명, 원광대는 93명에서 150명으로 정원이 늘어 의대 진학을 원하는 광주·전남 지역인재들에게도 문호가 더 넓어질 수 있다. 이들 대학은 전남대, 조선대와 마찬가지로 호남권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각 대학은 신입생 선발을 위해 대학들은 학칙을 개정해 이번엔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정원을 반영한다. 학칙을 개정하려면 개정안 공고와 이사회 심의·결의 등 학교별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학들은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변경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부모·수험생이 입시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대교협 등 학교 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고

24월 말까지 예고하고 5월 하순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종로학원이 2023학년도 수능 수학 1등급을 받은 고3 인원과 의대 정원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수도권에선 수학 1등급 인원이 6277명으로, 수도권 지역 12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 정원 993명의 6.3배에 달했다.

반면, 호남권에서 1.5배, 충청권은 1.8배, 부산·울산·경남은 2배, 대구·경북은 2.2배, 제주는 2.4배로 각각 나타났다.

결국, 수학 1등급 학생 수로 보면 수도권 학생이 비수도권 학생들보다 수능으로 지역 의대에 들어가 기 더욱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한 데 이어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앞으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학생의 의대 진학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인 민방위 훈련 빠준 구청 공무원 2명 징유

지인의 부탁을 받고 민방위 훈련을 빠준 광주 시 서구 공무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21일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 공무원 A(39)씨와 B(38)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광주시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인 C씨의 민방위 훈련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18년 A씨의 부탁으로 받고 지인의 훈련기록을 재작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행정 시스템 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대상자가 훈련을 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민을 재난이나 전시 상황 등에서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 제도를 공무원들이 공적인 전자 기록을 조작해 무력화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법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의대 교수들 움직임 분주 조선대 대응 방안 설문조사 실시

전남대 비대위도 오늘 첫 회의 사직서 동참 땀 의료봉괴 우려

정부가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의대 입학정원을 대학에 배정해 쉼을 박자 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해 사직서 제출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준비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 조선대에 따르면 조선대 의대 교수평의회는 비대위로 전환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설문조사는 하루 동안 진행되며, 22일 오전 10시께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는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항목은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에 대한 '자발적 사직서' 제출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자발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전공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집단행동으로 간주돼 의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정부가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제출 시기와 제출처에 대한 설문항목도 포함됐다.

제출시기는 크게 전국대의대교수 비대위 사직서 제출 예정일인 25일과 의대 학생 유급이 결정될 때, 전공의의 피해가 발생할 때 등으로 나눠 설문 이 진행되고 있다. 제출처는 개별적 제출과 교수 평의회를 통한 제출 등을 고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직서 제출과 별개로 진료시간 단축(주 40시간 또는 52시간)을 묻는 항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 의대교수평의회는 비대위 체제로 변경됐다. 전남대 의대 교수들은 설문을 거쳐 비대위원장 1명과 10명의 위원으로 비대위를 꾸렸다.

전남대 의대 비대위는 22일 낮 12시 첫 대응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병조 전남대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강행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전공의 및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탄압에 대해 전남대 의대 교수들의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전남대와 조선대의대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게 되면 최악의 의료봉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대병원원은 21일 비상진료 체계 운영으로 입원실 가동률이 저조한 재활의학과 병동(8동 12층)도 폐쇄했다. 앞서 비뇨기과·성형외과·정형외과 등 3개 병동도 폐쇄해 운영 중단 병동은 4개로 늘었다.

의정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 같은 날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중수본 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갈등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나무 나눠 드려요...잘 키우세요” 광주시 동구 직원들이 21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반려 나무 나눔’ 행사를 열고 후회나무와 서해나무 1200그루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나영주기자mjna@kwangju.co.kr

“아버지가 부장검사” 여성 속여 돈 뜯은 20대 실형

‘아버지가 부장검사’고 여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개인회생절차를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금전 피해를 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사기, 변호사법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과 2023년 교제 중이던 여성 2명

에게 대출을 받게 해 1330여만원을 가로채거나 고 급 수입승용차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명문대 법대 휴학생으로 소개하고, 아버지가 서울지역 검찰청 부장검사라고 속여 신뢰를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부부를 대신해 개인회생신청을 해주고 금품과 물건을 가로챈 혐의로

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부부에게 “개인회생을 하려면 매달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변제금을 주면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속여 총 580여만원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개인회생신청을 해야하는데 컴퓨터가 없으니 빌려주면 신청 후 돌려주겠다”며 노트북을 빌려 35만원의 받고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